



노년기의 건강과 소득 불평등

김유미 연구원

연구

건강과 소득 불평등은 생애기간 동안 누적되어 노년기에 더욱 심화되며, 현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불평등 정도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교육 및 소득 수준은 건강 격차를 발생시키고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어 소득 격차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별 기대수명 차이는 연금 격차를 확대시키고 국가별 소득 수준에 따른 장기요양케어(LTC) 부담은 노년기의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OECD는 노년기에 건강, 소득 불평등을 조장하는 요인들의 연계를 끊고 근로능력 향상을 위한 균등한 기회 제공, 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의료서비스의 균등한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권고함

■ OECD에 따르면,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건강과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현 젊은 세대가 고령이 되었을 때 이전 세대보다 불평등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¹⁾

- 나이가 들수록 교육 및 소득수준에 따라 건강 격차가 확대되고 건강악화로 인한 실직, 조기은퇴 등은 고용률을 감소시키고 노후소득을 줄어들게 하여 소득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음
- 현 젊은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기대수명이 길어졌으나 불안정한 노동시장, 사회경제적 환경차이(예, 교육수준)등으로 인해 소득불평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OECD 국가 중 2/3는 현 세대의 소득 불평등이 이전 세대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벨기에,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가 크게 나타남
 - * Gini계수 증가: 벨기에 16.2%p, 슬로바키아 13.7%p, 오스트리아 13.6%p

■ 교육 및 소득수준에 따라 건강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고용률 등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어 소득 격차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 및 소득수준에 따라 기대수명에 차이가 발생하며, 생애 소득에 따라서도 장수 갭이 발생하여

1) OECD(2017), "Preventing Ageing Unequally"

세대 간 격차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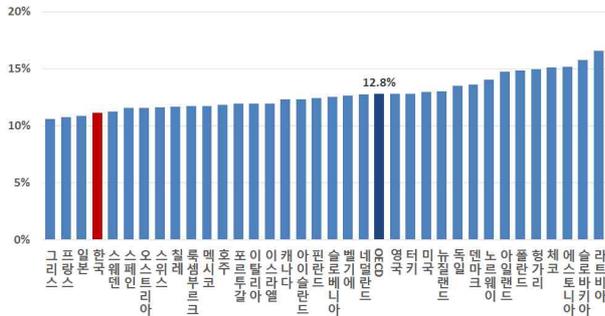
- OECD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의 기대수명보다 평균 7.5년(25세 남성 기준) 높게 나타났으며, 헝가리, 체코의 경우 13년 이상의 큰 차이를 보임
- DIW에 따르면, 1932~34년생의 경우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장수 갭이 4년이었으나, 젊은 세대일수록 그 격차는 점점 확대되어 1947~49년생의 장수 갭은 7년으로 나타남²⁾
- 건강수준에 따라 고용률과 소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생애 기간 동안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건강수준에 따른 고용률 차이는 평균적으로 20~40대 25%, 60세 이상 50%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그 차이는 약 20% 정도 심화됨
 - 건강수준에 따른 생애 소득 차이는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33%, 높은 경우 17%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수준별 기대수명 차이는 연금 격차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년기에 수요가 증가하는 장기요양케어(LTC)의 경우 국가별 본인부담 정도에 따라 소득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수준별 기대수명 차이는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의 연금수령기간을 더 길게 하여 생애기간동안 받는 연금급여의 격차를 증가시키고 소득재분배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퇴직 후 소득격차에 따른 기대수명 차이를 3년으로 가정한다면, 저소득자의 연금총액이 고소득자보다 평균 12.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1〉 참조)
- 장기요양케어(LTC)의 본인부담 정도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며, 몇몇 국가에서는 장기요양케어 이용 후 소득이 빈곤선 아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2〉 참조)
 - 스웨덴, 아이슬란드, 네덜란드의 경우 장기요양케어 비용을 국가에서 거의 100% 보조해주는 반면, 프랑스, 미국, 체코의 경우 장기요양케어서비스의 본인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2) Peter Haan & Daniel Kemptner & Holger Lüthen(2017), "The Rising Longevity Gap by Lifetime Earnings: Distributional Implications for the Pension System", DIW Berlin

〈그림 1〉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연금 격차



자료: OECD(2017), "Preventing Ageing Unequally"

〈그림 2〉 장기요양케어 이용에 따른 소득 변화



주: 소득 하위 20% 기준임

자료: OECD(2017), "Preventing Ageing Unequally"

■ OECD는 건강, 소득 불평등을 조성하는 요인들의 연계를 끊고 근로능력 향상을 위한 균등한 기회 제공, 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의료서비스의 균등한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권고함

- 노년기에 불평등을 조성하는 요인들은 생애 전반에 걸쳐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각 요인들의 연계를 끊을 수 있도록 유년기 때부터 양질의 교육과 미숙련 근로자들의 능력 향상을 위해 균등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건강(기대수명), 소득, 교육수준이 연금급여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고 기초연금, 급여/기여 규정 에 의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여 각 요인에 따른 연금격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모든 근로자를 위한 통합적인 연금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요양케어의 본인부담 정도를 낮춰 노후에 모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해야 함 **kiri**